

지역금융정보 및 산업체 신용평가기능 개선 방안

임 성 복

연구진

연구책임

- 임성복 / 도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 문

현재 대전은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덕특구내의 지식 집약형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신용보증 확대와 자금지원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기술성과 사업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최근 들어 향후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의 핵심은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여전히 양적인 측면의 지원방식이고 정보비대칭성 문제의 완화와 관련해서 보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신용보증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과 정부의 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 지역적 관점에서 적용되어야 할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금융에 있어서의 신용평가 운영방식에 관한 개선 과제에 대해서 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신용보증제도 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집약형의 혁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 지식집약형의 혁신 벤처기업들이 지역내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도약함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필드에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금지원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쪼록 본 연구결과가 대전지역의 지식집약형 혁신 벤처기업과 여러 건설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에 임해 준 연구자와 본 연구에 도움을 준 대전광역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4. 11.

대전발전연구원장 유 재 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장 머리말

- 우리나라는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지원체계를 운용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 현재 신용보증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개별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지원
- 정부는 최근 들어 향후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의 핵심은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양적인 측면의 지원방식이고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사전적 노력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보완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술금융 활성화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핵심은 기술신용평가사(TCB : Tech Credit Bureau) 제도의 도입으로
 -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은행·기업의 참여율 저조, 기술금융 시장의 평가 및 활용 역량 부족 그리고 제도외적 요인으로 인한 기술신용평가사 부 신용대출의 제약 등이 예상
 - 본격적인 사업 출범과 함께 이 부분에 후속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신용보증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과 정부의 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음
 - 특히 대전의 지역적 관점에서 대덕특구내의 지식집약형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와 자금지원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정책금융 기관들이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가고, 창업 초기의 혁신형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지역산업금융에 있어서의 신용평가 운영방식의 개선 과제를 ①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②신용보증제도 운용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중소기업 금융 여건 및 현황

1.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신용보증제도 운영 현황

- 우리나라는 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지원체계를 운용
 - 현재 신용보증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들은 개별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지원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일반 혁신기업, 수출기업, 영세소기업, 일반 창업기업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과 기술창업기업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해당 지역의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2013년 주요 보증공급계획에 의하면 두 기관 모두 미래 성장동력 확충,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보증 운용 방향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한편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소상공인 보증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혁신적인 요소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 대전지역 중소기업 금융 여건

1) 중소기업 금융 현황

- 대전지역의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으로 부서의 대출금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 대출비중은 감소세
- 신용보증 규모에 있어서는 최근 5년 사이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금융부문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장 분위기를 부정적인 면이 존재

[그림] 중소기업 대출비중 추이

(단위 : %)



- 대전지역의 신용보증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총 2조3,915억원으로 2003년의 1조2,846억원에 비해서 거의 두배 정도 증가

2) 대전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내용 및 지원 실태

- 대전광역시에서는 신용보증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동화, 창업 활성화, 정보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하고, 천재지변 및 노사분규,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

◇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영 실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들에서 제공되는 자금 지원제도는 크게 간접 지원제도와 직접 지원방식으로 진행
 - 간접 지원제도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증에 의해 저리의 금융기관 융자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직접 지원제도는 기업에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자금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형태임

제3장 지식집약형 중소제조업체의 현행 평가방식의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1. 우리나라 신용제도 운영 현황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개 보증기관의 총 보증공급 지원실적은 2013년말 기준 67.3조원(예상)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중 보증부대출 비중은 13% 수준임

-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의 핵심은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이라 할 수 있음.
- 현 정부의 신용보증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금융니즈를 토대로 기업의 생애주기별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양적인 측면의 지원방식으로 보완적인 대책이 요구됨

2. 정책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및 자금운용 현황

-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술성과 미래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통해 기술 및 미래 사업성 등 순수 비재무 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가동 중에 있음

3. 개선과제 : 기술금융의 필요성

- 지식집약형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와 자금지원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 도입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이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 혁신형 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임

제4장 기술금융 활성화 관련 정부정책 검토

1. 추진배경

- 정부는 창조경제의 실현과 관련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업의 자금문제 해소를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 전략을 최근 강구한 바 있음
-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기술신용평가사(TCB)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관련기관의 제도권내 참여 유인 확보 및 참여주체들의 역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고 있음

2. TCB 제도의 주요 내용 : 제도의 특징

- TCB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기존의 신용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체 특히 R&D형의 기술집약적인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 미래가치성을 존중하면서 positive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던 기존 기술평가와는 달리 TCB는 기술부문과 신용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신용평가 자료를 생산하여 대출심사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TCB 제도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 1) 은행·기업의 TCB 제도 참여율 저조

- TCB 제도가 도입되고 실제 금융기관을 통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제도 참여율 저조를 들 수 있음
 - 종전의 보증대출과는 달리 기술신용평가서부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채권의 부도 위험을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2) 기술 금융 시장의 평가·활용 역량 부족

- 기술 금융 시장에 있어서의 평가 및 이의 활용 역량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술평가 경험 면에서 TCB의 평가 역량 부족과 노하우 부족에 따른 문제점 역시 제기될 수 있음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경우 기술평가대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TCB 평가정보를 활용할 만한 내부 역량의 부족 문제가 우려됨

3) 제도외적 요인으로 인한 기술신용평가서부 신용대출 제약

- 제도외적 요인으로서 아직 우리나라는 기술거래시장이 미성숙하여 은행의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하는 점도 신용대출에 제약요인으로 제기될 수 있음
 - 국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신용평가서부 대출채권에 대한 은행의 원리금 회수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함
 - 그러므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보증부 대출보다는 기술신용평가에 근거한 신용대출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제5장 정부의 기술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보완 대책

1. 기술금융 특화·전문화

1) 기술평가보증 지원체제 강화

- 현재 기술혁신기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평가보증 대상을 신기술사업자로 확대하여 수요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임
- 기술평가사 배출 확대 등 기술평가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일반직원의 능력 배양을 통해 영업점의 기술평가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2) 기술혁신기업 지원 활성화

- 향후 기술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과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따른 금융지원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혁신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로 직면하게 되는 위험의 종류와 성격을 파악하여 각 성장단계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과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기술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은 안정 성숙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물적담보 확보 및 신용추적 등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창업 및 성장단계와 연계한 체계적 지원 없이는 원만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성장단계의 기업은 추가적인 기술개발과 사업 확장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등 성장토대를 구축하는 기업임
- 각종 사업화 자금에 대한 중점적인 보증지원과 함께, 보증과 투자 등이 복

합된 Hybrid상품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성과와 연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해야 함

2. 기술평가보증 확대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효과적 육성

1) 기술평가 활성화를 통한 기술평가·금융시스템 혁신

- 지속적인 평가시스템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 기술평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사업 확대 및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신용평가기관은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2) One-Process 확대를 통한 정책금융의 효율성 극대화

- 정책자금의 One-Stop 지원이 갖는 우선적인 효과는,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 위주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음

3. 금융 인프라 확충

- 향후 기술금융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술평가 역시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TCB 평가등급뿐만 아니라 평가등급 산출에 사용된 각 평가지표별 과거 부도율과 분포, 평가모형을 은행에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임
- 지식집약형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 업 신용평가기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기업전문 CB(Credit Bureau)를 육성하여 여기에 중소기업 정보를 집중시킴으로써 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대덕의 경우 5년 이내의 초기단계 기업들은 자기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첨단, 초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함
- 또한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창조금융 시스템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거나, 기업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을 중심으로 보증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제6장 지역산업금융 신용평가 운영방식 개선

1. 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 신용보증 및 신용대출 확대제도의 강화

- 우선 단기적으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예금은행을 비롯한 비통화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과 같은 중앙의 신용보증기금이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신용평가 기능 강화

-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및 산업에 대한 신

용조사와 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담보대출 중심에서 신용대출 중심으로 지역금융의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1) 지역기업 정보센터 설립

- 신용조사와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및 기업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여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즉, 지역 내 기업의 각종 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가칭 「지역기업 정보센터」와 같은 것을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 금융기관들의 여신심사에 이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소규모 지역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아웃소싱 시스템 마련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많은 신용보증기금 회사와의 업무협력 확대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회사와 더불어 신용조사, 평가기능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함
-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신용평가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토록 함

2. 신용보증제도 운용상 개선방안

1) 중소기업 전담 신용평가기관의 설립

(1) 전략적 제휴나 공동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전담 신용평가기관 설립

- 지역적으로 보면 여러 신용평가기관이 있으나 주로 회사채 발행능력이 있는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조사에서 심사, 평가까지 중소기업의 신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금융기관을 위시한 지역경제계 전체의 공동투자를 통한 지역중소기업의 신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2) 지역 신용평가기관의 설립을 통한 보증 서비스의 강화

- 현재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는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소규모 지역금융기관의 경우 인력과 인프라의 한계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공동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회사의 설립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신용평가회사는 각종 신용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지역기업정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됨

2)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대

- 최근 수년간 중소기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정책보증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급증하여 향후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대가 요구됨

3) 신용보증제도 개선·확대 및 지원기관과의 연계 확대

-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의 확대로 자금애로 해소를 통한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 성공가능성 있는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대전신용보증재단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와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여러 중소기업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향후 중소기업 대상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경영지도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임

- 목 차 -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8
제2장 중소기업 금융 여건 및 현황	11
1.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신용보증제도 운영 현황	11
2. 대전지역 중소기업 금융 여건	13
1) 중소기업 금융 현황	13
2) 대전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내용 및 지원 실태	20
제3장 지식집약형 중소제조업체의 현행 평가방식의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26
1. 우리나라 신용제도 운영 현황	26
2. 정책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및 자금운용 현황	30
1) 중소기업진흥공단	30
2) 기술보증기금	32
3) 신용보증기금	33
3. 개선과제 : 기술금융의 필요성	35
제4장 기술금융 활성화 관련 정부정책 검토	38
1. 추진배경	38
2. TCB 제도의 주요 내용	39
1) TCB 제도 관련 주체	39
2) TCB 제도의 특징	40
3. TCB 제도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41

1) 은행·기업의 TCB 제도 참여율 저조	41
2) 기술금융 시장의 평가·활용 역량 부족	42
3) 제도외적 요인으로 인한 기술신용평가서부 신용대출 제약	42
4. TCB 제도의 정책적 보완 사항	43
1) 은행·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43
2) 기술금융 시장의 평가·활용 역량 강화	44
3) 제도외적 요인 개선을 통한 기술신용대출의 확대	47
제5장 정부의 기술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보완 대책	50
1. 기술금융 특화·전문화	50
1) 기술평가보증 지원체계 강화	50
2) 기술혁신기업 지원 활성화	51
2. 기술평가보증 확대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효과적 육성	54
1) 기술평가 활성화를 통한 기술평가·금융시스템 혁신	55
2) One-Process 확대를 통한 정책금융의 효율성 극대화	56
3. 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	57
제6장 지역산업금융 신용평가 운영방식 개선	63
1. 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63
1) 신용보증 및 신용대출 확대제도의 강화	64
2) 신용평가 기능 강화	65
2. 신용보증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66
1) 중소기업 전담 신용평가기관의 설립	66
2)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대	68
3) 신용보증제도 개선·확대 및 지원기관과의 연계 확대	69
4) 기술가치보험제도 도입	70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73
1. 요약	73
2. 정책제언	76
참고문헌	78

- 표 목 차 -

<표 2-1> 신용보증기관별 업무 현황	11
<표 2-2> 대전지역 기업자금 대출금 변화 추이	14
<표 2-3> 대전지역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은행별)	15
<표 2-4> 대전지역 신용보증 규모	17
<표 2-5> 대전신용보증(업종별)	19
<표 2-6> 사업목적별 지원정책 종합	23
<표 2-7> 기관별 자금 융자·지원사업 유형	23
<표 2-8>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현황	24
<표 3-1> 신용보증기관별 보증잔액 현황	29

- 그 립 목 차 -

[그림 2-1]	기업자금 대출금 중 대기업·중소기업 대출금 변화 추이	14
[그림 2-2]	중소기업 대출비중 추이	15
[그림 2-3]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변화 추이	16
[그림 2-4]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 변화 추이	16
[그림 2-5]	신용보증 규모 변화 추이	17
[그림 2-6]	대출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변화 추이	18
[그림 2-7]	업종별 추이(2003, 2006, 2010, 2013년 비교)	19
[그림 2-8]	산업자금 지원 신청 절차	22
[그림 3-1]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추이	27
[그림 3-2]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구성비 및 GDP대비 신용보증 추이	28
[그림 3-3]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모형 구조도	33
[그림 4-1]	기술기업에 대한 보험가입, 보험증서 발급 및 대출 흐름도	44
[그림 5-1]	기술개발 프로세스별 기술평가보증 지원체계(예시)	51
[그림 5-2]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금융상품(예시)	52
[그림 5-3]	기술평가 흐름도	54
[그림 5-4]	기술발전단계별 지원자금 규모와 Death Valley	55
[그림 5-5]	One-Stop 지원 절차도	56

제 1 장

머 리 말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지원체계를 운용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개별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대덕특구내의 지식집약형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와 자금지원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가고, 창업 초기의 혁신형 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R&D-창업-사업화 등 기술혁신의 전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공급을 포괄적으로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이라고 하는데 미래 수익을 가져올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의 개발, 사업화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사업들이 전개되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술금융을 포함하여 기존의 정책금융의 운용방식의 개선과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대덕을 중심으로 한 유수의 첨단기술기업과 유망한 혁신기업들의 자금 확보와 관련 중소 사업체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설립과 지역기업정보센터의 설립을 통해 전문사업체의 금융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향후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의 핵심은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양적인 측면의 지원방식이고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위

한 사전적 노력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보완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금융 활성화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핵심은 기술신용평가사(TCB : Tech Credit Bureau) 제도의 도입인데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은행·기업의 참여율 저조, 기술금융 시장의 평가 및 활용 역량 부족 그리고 제도외적 요인으로 인한 기술신용평가서부 신용대출의 제약 등이 예상되며 본격적인 사업 출범과 함께 이 부분에 후속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신용보증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과 정부의 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적 관점에서 지역산업금융에 있어서의 신용평가 운영방식의 개선 과제를 ①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②신용보증제도 운용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신용보증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대전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현황과 대전시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내용 및 지원 실태를 분석코자 한다.

지식집약형 중소제조업체의 현행 평가방식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개선과제를 도출해 본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코자 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관련 TCB제도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본 제도가 갖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보완 사항을 정리하도록 한다.

향후 궁극적으로 정부가 기술금융과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보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기술금융을 둘러싼 기술평가보증 지원체계 강화, 기술혁신기업 지원 활성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대덕특구 지역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하여 금융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전지역 산업금융에 관한 신용평가 운영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신용보증 및 신용대출 확대 제도의 강화, 신용평가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신용보증제도 운영상의 여러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헌 및 각 기관의 관련자료,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문헌연구를 토대로 진행하고자 한다.

제 2 장

중소기업 금융 여건 및 현황

제1절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신용보증제도 운영 현황

제2절 대전지역 중소기업 금융 여건

제2장 중소기업 금융 여건 및 현황

1.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신용보증제도 운영 현황

우리나라는 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개별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일반 혁신기업, 수출기업, 영세소기업, 일반 창업기업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과 기술창업기업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해당 지역의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체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유경원외(2014), 19-20쪽).

< 표 2-1 > 신용보증기관별 업무 현황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적근거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설립연도	1976년	1989년	1996년
설립 목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
보증 대상	일반 혁신기업, 수출기업, 일반 창업기업 중심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 기술창업기업 중심	광역자치단체 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 내용	① 신용보증 및 보증연 계 투자 ② 경영지도 ③ 신용조사 및 신용정 보의 관리 ④ 구상권의 행사 ⑤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연구 ※ 그 밖에 재보증 및 유동 회회사 보증업무 수행 가 능	① 기술신용보증 ② 일반신용보증 ③ 기업에 대한 경영지 도 및 기술지도 ④ 신용조사 및 신용정 보의 관리 ⑤ 기술평가 ⑥ 구상권행사 ⑦ 신용보증제도의 조 사·연구 ※ 그 밖에 재보증 및 유 동회회사 보증업무 수행 가능	① 신용보증 ②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의 관리 ③ 경영지도 ④ 구상권 행사 등
차별화된 업무	SOC신용보증 신용보험	기술평가 및 인증 벤처·이노비즈 기업 발굴	개인보증
보증방식	직접보증 및 위탁보증	직접보증	직접보증
보증요율	0.5~3.0%(대기업3.5%)	0.5~3.0%	0.5~2.0%
동일 기업 보증한도	30억(신·기보 합산운영)		8억원
기금조성	정부 및 금융기관	정부 및 금융기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법정운용 배수	20배	20배	15배

자료 : 유경원외(2014), 20쪽에서 재인용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2013년 주요 보증공급계획에 의하면 두 기
관 모두 미래 성장동력 확충,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보증 운용 방
향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소상공인
보증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혁신적인 요소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유경원외(2014), 23-24쪽).

그러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궁극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은 주요 업무내용이 기술신용보증과 기술평가 등
에 있는 만큼 다른 신용보증기관들에 비해 중소기업 금융정책에 있어서 혁신

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업무영역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신용보증에 기초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운용 면에서 역할과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2. 대전지역 중소기업 금융 여건

1) 중소기업 금융 현황

대전지역의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금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 대출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보증 규모에 있어서는 최근 5년 사이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금융부문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장 분위기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전지역 총대출금은 2013년말 기준으로 총 23조8,598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업자금 대출금은 10조9,266억원으로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39.4%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은 2008년 42.9%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매년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어 대출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 비중이 적으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부족 문제와 연결하여 볼 때 기업자금 지원 운용 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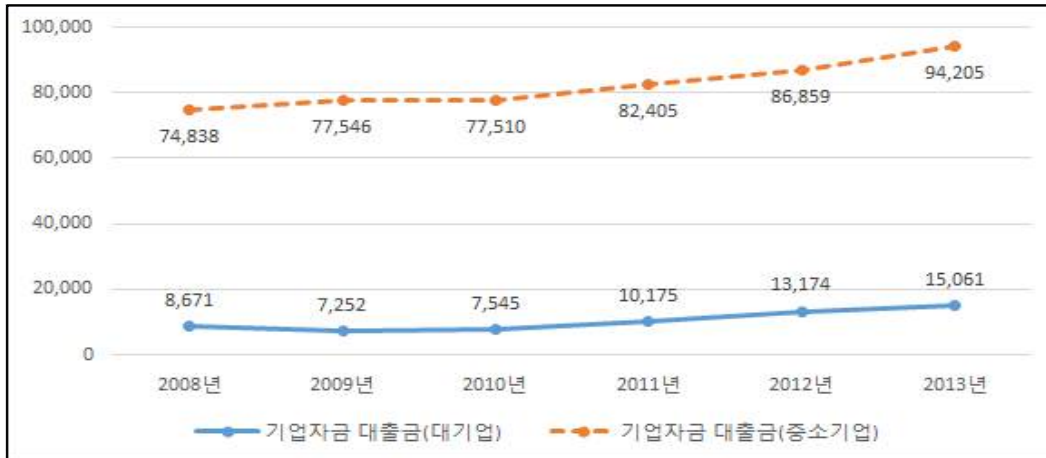
< 표 2-2 > 대전지역 기업자금 대출금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연월말	총대출금	기업자금 대출금					중소기업 대출비중
		소계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설자금	
2008	174,282	83,509	8,671	74,838	61,348	13,490	42.9
2009	178,849	84,798	7,252	77,546	59,228	18,318	43.4
2010	185,932	85,055	7,545	77,510	57,639	19,871	41.7
2011	206,160	92,581	10,175	82,405	59,239	23,167	40.0
2012	219,680	100,033	13,174	86,859	58,760	28,099	39.5
2013	238,598	109,266	15,061	94,205	62,137	32,068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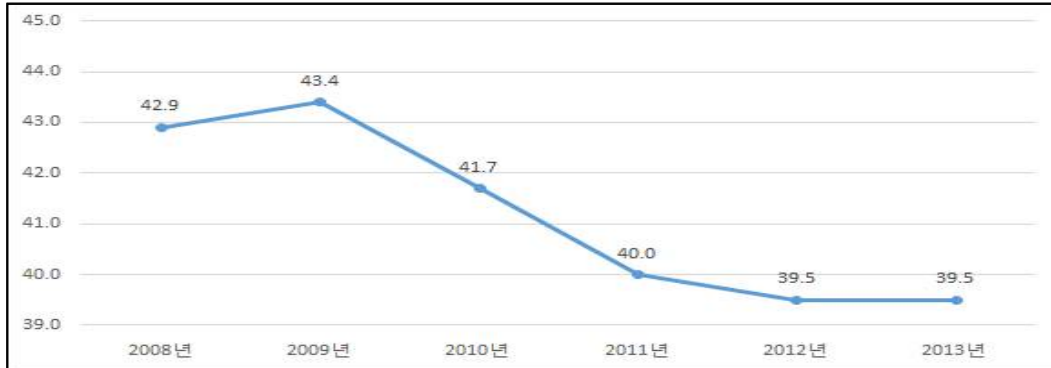
[그림 2-1] 기업자금 대출금 중 대기업·중소기업 대출금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그림 2-2] 중소기업 대출비중 추이

(단위 : %)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하여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하여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출비율 추이를 보면 일반은행은 2003년 43.6%에서 2013년 35.5%로 크게 감소한 반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특수은행은 2003년 49.7%에서 2013년 49.1%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반은행에 비해서 특수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있어서 호의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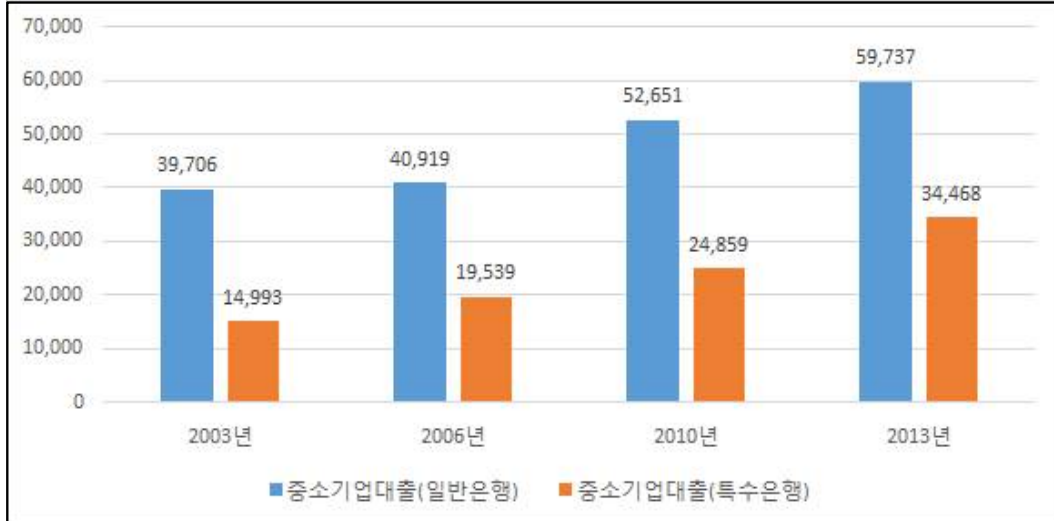
< 표 2-3 > 대전지역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은행별)

(단위 : 억원)

연월말	총 계		일반은행		특수은행	
	총대출금	중소기업 대출	총대출금	중소기업 대출	총대출금	중소기업 대출
2003	121,145	54,699	90,984	39,706	30,161	14,993
2004	133,549	52,733	95,538	36,721	38,011	16,012
2005	145,215	52,712	99,590	35,091	45,625	17,621
2006	158,256	60,458	110,282	40,919	47,974	19,539
2007	166,049	69,498	116,713	47,664	49,336	21,834
2008	174,282	74,838	122,663	50,590	51,619	24,247
2009	178,849	77,546	126,561	52,207	52,288	25,339
2010	185,932	77,510	132,089	52,651	53,843	24,859
2011	206,160	82,405	146,143	53,735	60,017	28,671
2012	219,680	86,859	154,297	54,948	65,383	31,912
2013	238,598	94,205	168,379	59,737	70,219	34,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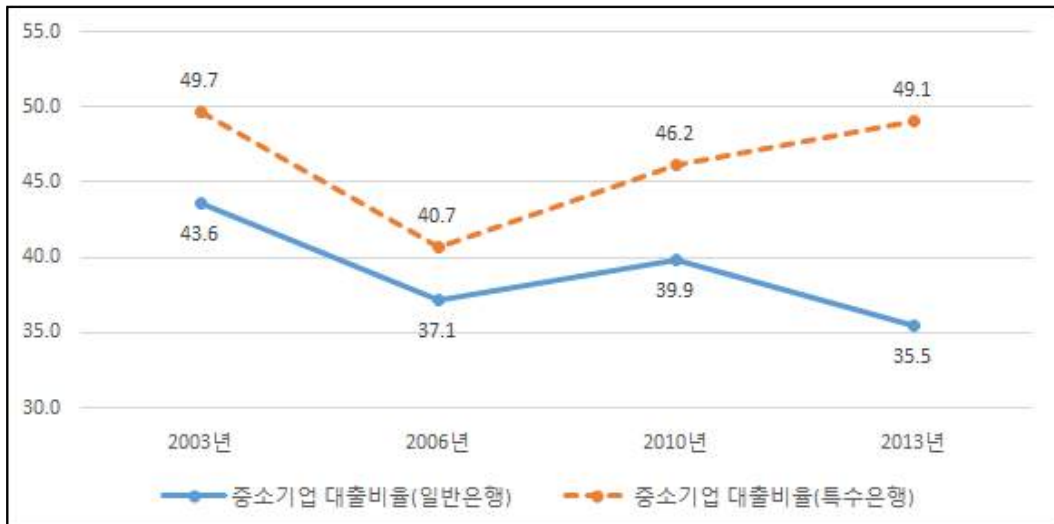
[그림 2-3]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그림 2-4]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대전지역의 신용보증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총 2조3,915억원으로 2003년의 1조2,846억원에 비해서 거의 두배 정도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보증의 경우 역시 약 두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어음보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2금융보증은 3배 이상 증가하여 신용보증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표 2-4 > 대전지역 신용보증 규모

(단위 : 억원)

연월말	합 계	대출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기 타
2003	12,846	10,550	655	857	782
2004	13,141	10,930	664	913	632
2005	12,599	10,528	594	967	510
2006	12,992	10,592	464	1,016	919
2007	13,131	10,680	578	1,078	794
2008	14,521	11,708	576	1,508	729
2009	19,888	15,530	695	2,183	1,480
2010	21,171	16,529	505	2,710	1,426
2011	21,232	16,678	552	2,613	1,389
2012	22,233	17,816	544	2,548	1,325
2013	23,915	19,457	522	2,654	1,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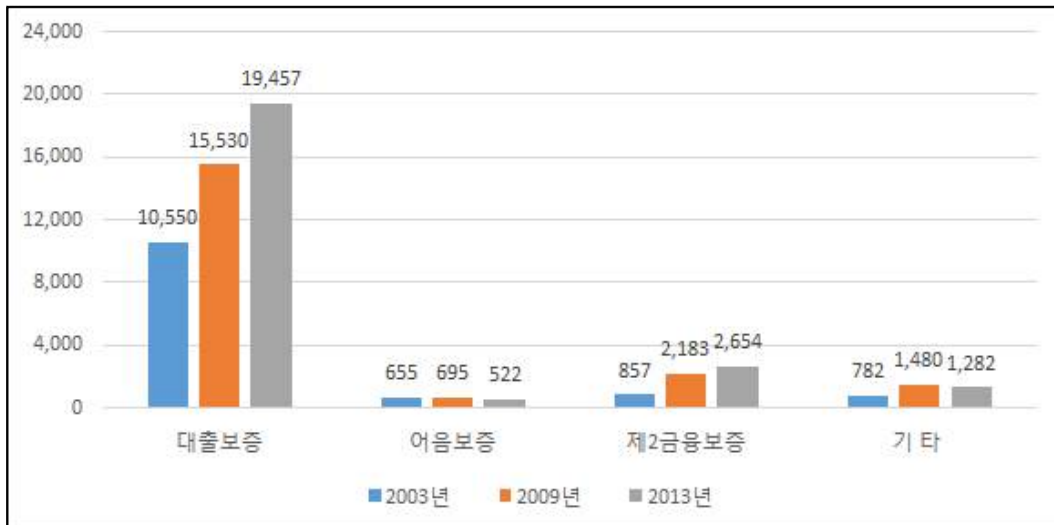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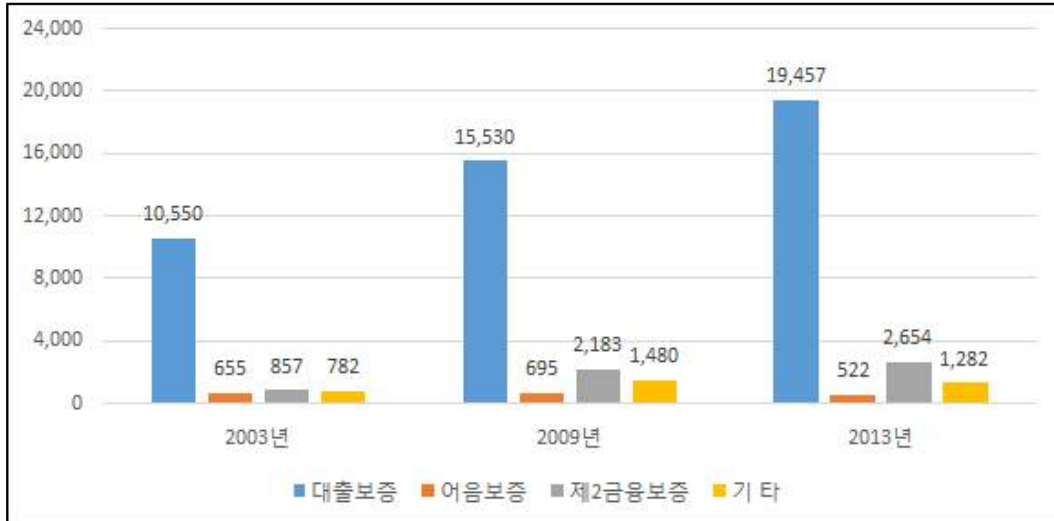
[그림 2-5] 신용보증 규모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그림 2-6] 대출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한편 2013년 대전지역의 전체 신용보증 규모 2조3,915억원에 대한 업종별 신용보증액은 제조업이 1조287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702억원, 건설업 2,127억원, 기타 4,79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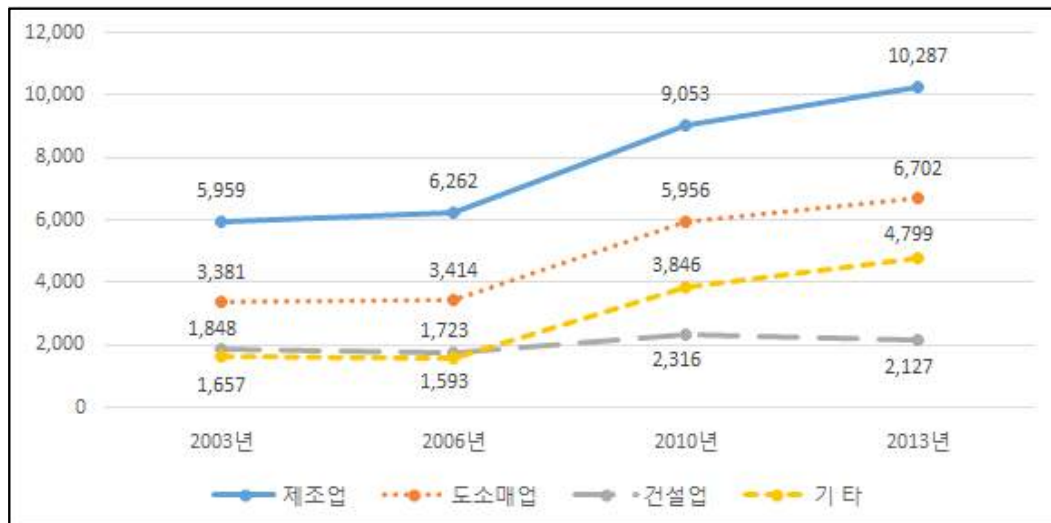
< 표 2-5> 대전신용보증 (업종별)

(단위 : 억원)

연월말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기 타
2003	12,846	5,959	3,381	1,848	1,657
2004	13,141	6,232	3,491	1,933	1,484
2005	12,599	6,044	3,353	1,790	1,412
2006	12,992	6,262	3,414	1,723	1,593
2007	13,131	6,198	3,404	1,751	1,778
2008	14,521	6,926	3,856	1,723	2,016
2009	19,888	8,869	5,418	2,348	3,252
2010	21,171	9,053	5,956	2,316	3,846
2011	21,232	8,956	6,213	2,208	3,855
2012	22,233	9,432	6,373	2,116	4,313
2013	23,915	10,287	6,702	2,127	4,799

[그림 2-7] 업종별 추이(2003, 2006, 2010, 2013년 비교)

(단위 : 억원)



2) 대전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내용 및 지원 실태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내용

대전광역시에서는 신용보증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동화, 창업 활성화, 정보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하고, 천재지변 및 노사분규,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금의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 산업체에 대한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및 기금을 마련하여 매년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산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은 용도에 따라 창업자금, 시설자금, 시장개척자금,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기술개발자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들 자금은 지원조건에 따라 융자금, 보조금(출연금 포함), 투자금, 보험 및 신용보증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별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자금은 일반적으로 기업 창업, 설비·원자재 구입, 공장건립 등의 목적을 위해 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자금인데, 여기에는 은행이 자체 조달한 자금과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위탁한 자금(정부위탁 융자금)이 있다. 이들 자금간의 차이점은 정부위탁 융자금의 경우 은행 자체자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기간이 길어 유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융자금은 담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담보가 없는 경우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둘째, 보조금(출연금 포함)은 기술개발비, 교육·훈련비, 해외전시회 참가비 등과 같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하는 자금

이다. 보조금의 규모는 사업 및 지원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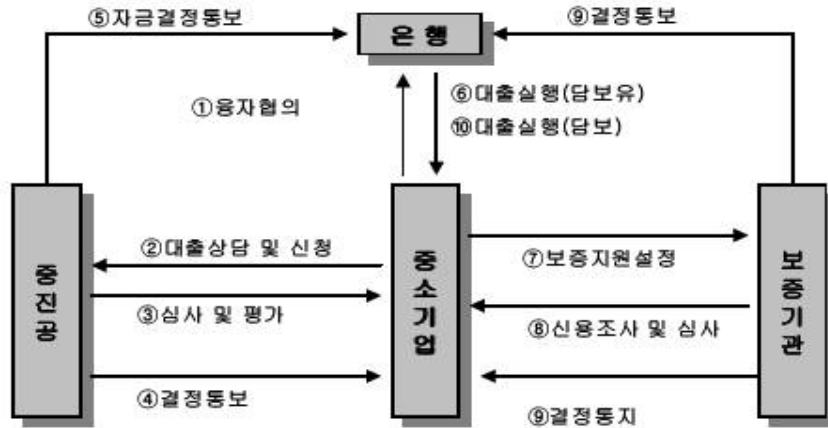
셋째, 투자금은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구조조정회사 등을 통하여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자금을 받는 대신에 회사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형태(유상증자)이다. 이들 투자회사들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금(펀드)을 조성하는데, 자금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부 참여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 보험방식의 자금지원을 들 수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거래기업이 부도·폐업 등의 상황을 맞게 될 경우, 과거 거래과정에서 받은 어음이나 매출채권이 거의 휴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방해 주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즉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거래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만일의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경우 부금납부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부도어음을 전질 담보로 부도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방식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은행에서 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보험공사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담보로 대체할 수 있게 해 준다.

대부분의 자금 융자·지원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업력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일부 자금은 창업초기이거나 소규모 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자금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업자금 지원은 업력이 5년 미만인 창업자에게만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자영업 또는 소기업(제조업은 50인 미만, 서비스업은 10인 미만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지원제도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며,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이행보증, 수출보험 등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등 지원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림 2-8] 산업자금 지원 신청 절차



주) ① ~ ⑥ - 담보제공 가능업체
 ⑦ ~ ⑩ - 담보제공 불가능업체

자료 : 임성복(2009), 58쪽에서 재인용

②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영 실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들에서 제공되는 자금 지원제도는 크게 간접 지원제도와 직접 지원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 지원제도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증에 의해 저리의 금융기관 용자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직접 지원제도는 기업에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자금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자금 용자-지원 방식의 기업지원제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와 같이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13개(중소기업청 8개, 기타 기관 5개)와 대전시에서 3개(대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개) 등 총 18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임성복(2009), 59쪽).

< 표 2-6 > 사업목적별 지원정책 종합

구 분	사업목적								합계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수출	정보화	벤처	기타	
중기청	8	33	9	10	11	5	14	6	96
기 타	5	12	17	9	19	3	0	4	69
중기센터	3	2	0	3	3	1	6	2	20
특구본부	0	5	1	2	3	0	3	1	15
테크노파크	0	10	0	1	1	0	2	0	14
합계	16	62	27	25	37	9	25	13	214

자료 : 임성복(2009), 59쪽에서 인용

< 표 2-7 > 기관별 자금 용자·지원사업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13)	중소기업청 (8)	중소·벤처 창업자금
		기술개발 사업화 기금
		경영혁신 자금
		구조조정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사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기타 (5)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산업단지활성화사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보증지원(신용보증기금)
		보험지원 제도(신용보증기금)
대전시 (3)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3)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소기업유통업자금 지원

③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그 대상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본 결과, 다음의 <표 3-10>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창업기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는 19개, 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가 8개,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가 9개 등 특정 성장단계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원제도가 총 36개(16.8%)인 반면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제도가 총 214개 지원제도 중 178개(83.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지원제도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정책에 대한 니즈 혹은 경영애로 사항이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표 2-8 >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현황

구 분	성장단계				합계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제한없음	
중기청	13	7	6	70	96
기 타	1	0	3	65	69
중기센터	3	0	0	17	20
특구본부	2	0	0	13	15
테크노파크	0	1	0	13	14
합계	19	8	9	178	214

자료 : 임성복(2009), 59쪽에서 인용

제 3 장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체의 현행 평가방식의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제1절 우리나라 신용제도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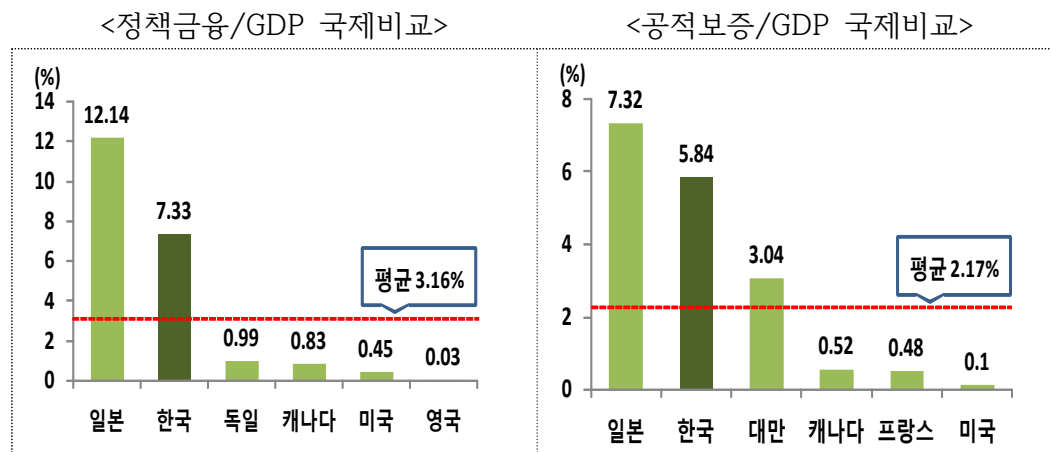
제2절 정책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및 자금운용 현황

제3절 개선과제 : 기술금융의 필요성

제3장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현행 평가방식의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1. 우리나라 신용제도 운영 현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개 보증기관의 총보증공급 지원실적은 2013년말 기준 67.3조원(예상)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중 보증부대출 비중은 13% 후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보증규모를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GDP대비 정책금융이나 공적보증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비교 대상국중 일본이 압도적으로 국가 경제에서 정책금융과 공적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유경원 외(2014.9), 21쪽).



주: 정책금융은 보증과 정책자금 대출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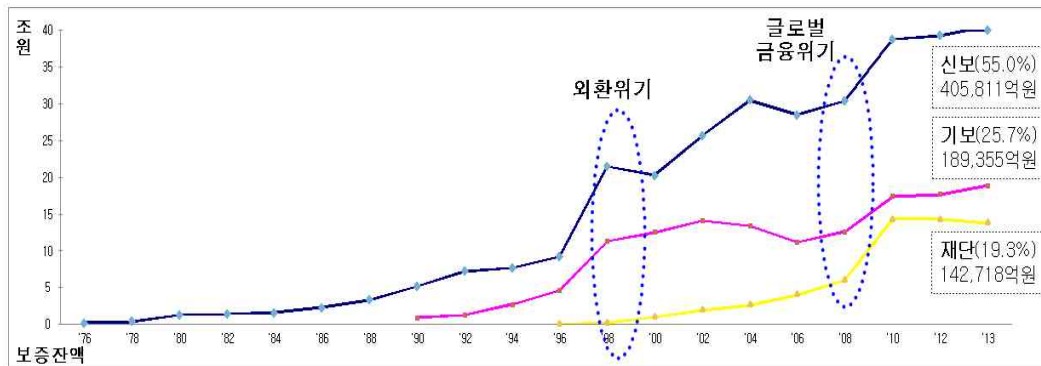
주: 신·기보(유동화보증 포함), 지신보

한편 시간에 따른 이들 기금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5년 약 41조원 수준의

신·기보 신용보증 규모는 2013년말 기준 약 59.6조원(일반보증 기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금융 확대정책에 보증제도가 활용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 차례에 걸친 신용보증 공급규모의 대폭 증가에 따라 1996년 3%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GDP대비 신용보증잔액 비율은 2000년대 중반 보증규모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기준으로 6.1%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환위기 발생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유경원 외(2014.9), 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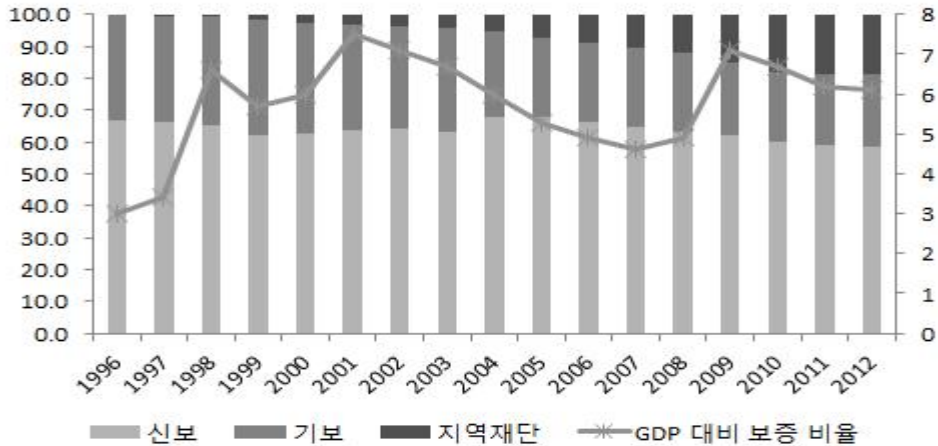
[그림 3-1]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추이



자료 : 유경원 외(2014.9), 20쪽에서 인용

2010년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 방안에 따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한 단계적 신용보증 규모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의 회복 지연 등으로 신용보증 규모의 급격한 축소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공급 잔액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유경원 외(2014.9), 22쪽).

[그림 3-2]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구성비 및 GDP 대비 신용보증 추이



자료 : 유경원 외(2014.9), 22쪽

한편 경제여건 및 정부의 정책변화 등의 요인으로 보증기관별로 보증공급이 확대 또는 축소되면서 보증기관별 비중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보증재단의 비중 확대로 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달리 정부의 보증규모 감축계획에서 제외된 데에 기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신용보증기관별 보증잔액과 보증수혜업체 수를 살펴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및 보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006년 약 4조원과 약 16만 4천건에서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약 14조 3천억원과 약 82만 5천건으로 각각 약 357%, 약 503% 증가한 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각각 약 40조 5천억원과 약 22만 1천건, 약 19조원과 약 6만 3천건으로, 각각 142%와 109%, 169%와 123% 증가하는데 그쳤다 (유경원 외(2014.9), 23쪽).

< 표 3-1 > 신용보증기관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조원, 만개)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3
신용보증기금	28.5 (20.3)	28.5 (19.0)	30.4 (19.4)	39.2 (21.8)	38.8 (22.9)	38.4 (23.3)	39.3 (23.0)	40.6 (22.3)	40.5 (22.1)
기술보증기금	11.2 (5.1)	11.2 (4.4)	12.6 (4.1)	17.1 (4.6)	17.4 (5.0)	17.0 (5.2)	17.6 (5.7)	18.9 (6.3)	19.0 (6.3)
지역신용 보증재단	4.0 (16.4)	4.6 (19.5)	6.0 (30.6)	11.2 (66.0)	13.3 (83.3)	13.6 (83.5)	13.5 (82.9)	14.2 (83.7)	14.3 (82.5)
합 계	43.7 (41.8)	44.3 (42.9)	49.0 (54.1)	67.5 (92.4)	69.5 (111.2)	69.0 (112.0)	70.4 (111.6)	73.7 (112.3)	73.8 (110.9)

주: ()내는 보증수혜업체수.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 : 유경원 외(2014.9), 23쪽에서 인용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의 핵심은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이라 할 수 있다.¹⁾ 기본 아이디어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중소기업을 통해 사업화되어 성공할 때까지 필요한 금융지원을 수요자 니즈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공급의 조절관 역할을 하는 신·기보 기능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고 대출·보증 중심의 지원방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방식의 다변화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기존 수동적 지원자(supporter) 역할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견인자(attractor)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다. 즉 창조경제하의 시장의 실패로 인해 시장성립이 어려운 창조금융 공급에 있어서 초기에 정부가 앞서서 시장을 형성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신용보증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금융니즈를 토대로 기업의 생애주기별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양적인 측면의 지원방식이고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사전적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보완적인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3>과 금융위원회,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방안,' 2014.1.8. 참조

2. 정책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및 자금운용 현황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술성과 미래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증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이래 기술 및 미래 사업성 등 순수 비재무 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가동 중에 있다(중소기업연구원(2009), 15쪽).

특히 정책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기술성과 미래사업성 위주로 기업 신용평가를 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 즉,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과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방식이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간 보증대상의 차별화를 확대하도록 하였는데, 크게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일반혁신형 기업, 수출, 영세소기업 지원에 특화하도록 한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 지원에 특화하도록 하였다(중소기업연구원(2009), 16쪽).

1)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 지원 목표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특수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장기 설비 및 운전자금 위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시 비재무평가 비중 확대를 간접적으로 반증할 수 있어 중진공의 지난 몇 년간의 정책자금 운용상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중소기업연구원(2009), 16쪽).

첫째,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자금 구조별로 재설계하여 성단단계별로 운용하

고 있다. 성장단계가 낮은 단계에서 성숙기와 쇠퇴기로 나누어 벤처창업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경영혁신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구조조정자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둘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가운데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 미래 사업성과 기술성에 기초한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성과 미래사업성 위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신용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중소기업연구원(2009), 18쪽).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신용평가는 예비평가를 통과하면, 기업유형과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하여 재무평가와 기술·사업성 평가를 종합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재무평가는 재무정보를 통하여 부실 가능성과 자산 건전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재무평가 항목에는 총자산 증가율(성장성), 매출액영업이익률(수익성), 자기자본 비율(안정성), 자기자본회전율(활동성), 총자본투자효율(생산성), 현금흐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무등급은 통계적 기법에 의해 도출된 재무평가항목을 바탕으로 등급별 추정 부실률과 점유율을 고려하여 13등급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업신용평가 시 재무제표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기술사업성 평가는 계층적 의사결정기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기 구축된 기술사업성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자들의 판단을 평점화하여 등급을 구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사업성 평가는 기술성(기술개발기반, 기술수준, 생산기술), 시장성(시장지위, 제품경쟁력), 경영능력, 미래재무 등으로 평가 항목을 가중 평균하여 사업성을 평점으로 매긴 후 등급을 나눈다. 이후 재무요인과 기술사업성 요인 평가에서 각각 산출된 등급을 Matrix화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한편, 기술등급은 기술사업성 중 기술성 부문과 시장성 부문만을 고려하여 15개 등급의 기술 등급을 도출하여 등급을 조정하는 운용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

2) 기술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89년 설립된 이후 환경변화에 따라 역할이 변하였지만,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험관리는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신용평가모형의 개선(2004), 기술평가모형의 구축(2005), 그리고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구축(2007)을 진행하였다(중소기업연구원(2009), 20쪽). 이 경우 기술평가란 대상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기술가치평가란 기술평가와 가치평가가 결합된 용어로서, 기술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시장에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의 이전 및 거래나 담보가치 산정 등에 이용된다. 이런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에 특화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보증 시 기술평가모형(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에 의거하여 기술평가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나, 기술평가보증 시에는 재무/계량중심의 기업평가모형에 의한 기업평가등급을 별도로 산출하여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및 보증자산의 리스크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중소기업연구원(2009), 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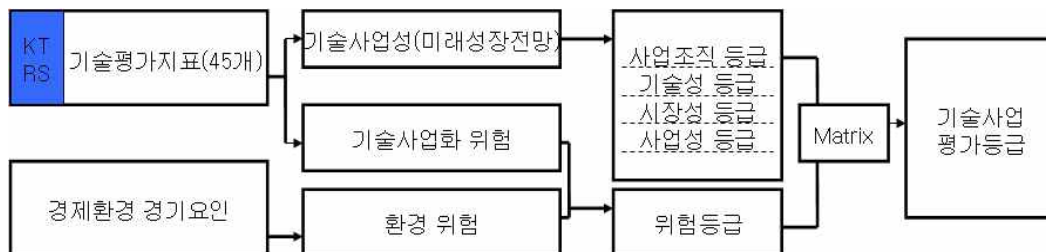
기술평가모형(KTRS)은 기업의 부도예측이 주요 목적인 일반 신용평가시스템과 달리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사업성 항목에 재무관련 지표가 포함하여 장래 성장전망과 평가 대상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산출하여 Matrix 결합을 통해 10개의 기술평가등급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평가지표는 16개의 기술평가항목 및 45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되며,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각각 계량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심사항목별 평가 입력 및 Balance Matrix에 의해 평가항목이 자동 평가된다.

한편 기술평가모형은 6개 업종(일반산업용, S/W용, 바이오산업용, 환경산업

용, 전문디자인산업용, 닷컴산업용)과 3개의 기술수준(High, Middle, Basic)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3-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모형 구조도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2009), 22쪽에서 인용

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심사는 기업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정성·정량적인 비재무 자료를 통해 ‘일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려는 제도적 목적을 갖고 있다(중소기업연구원(2009), 24쪽). 즉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평가시스템은 신용도가 낮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신용보증의 공공성과 ‘품질보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은 크게 업력에 따라 구분되어 운용하고 있는데, 업력 3년 이상 기업은 ‘기업신용평가시스템’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 CCRS)으로, 그리고 3년 미만 기업은 ‘창업기업신용평가시스템’ (Startup Business Scoring System, SBSS)에 의한 종합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금액별 보조지표를 적용하여 보증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다만 2009년 2월부터 간이심사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소액보증자 동평가시스템(ARS)으로 평가하며, 업력이 3년 미만이라도 보증규모가 큰 경우(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CCRS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중소기업연구원

(2009), 24쪽).

CCRS하에서 기업 신용평가는 재무, 계량재무, 순수비재무부문으로 항목별 결합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재무항목의 경우 금융비용 부담정도, 변동성,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8개 범주에 43개의 재무비율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자산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계량비재무 항목은 기업현황 정보(종업원수, 주 사업장소유 등), 기업운영정보(설립운영기간, 자사제조비율 등), 대표자 특성(동종업계 종사년수 등), 신용보증기금 금융정보(최장 연체일수,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계좌수 등), 각종 대표자 금융정보 등 5개 범주 내에 35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자산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중소기업연구원(2009), 26쪽).

한편 순수비재무 항목은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산업위험 등 4개 범주에 13개 지표를 설정하여 기업 자산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SBSS는 창업기업의 성장가능성과 특수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데,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 6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무평가모형, 계량비재무평가모형, 순수비재무모형으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결합등급을 산출하고 필터링을 거쳐 최종 종합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다(중소기업연구원(2009), 27쪽).

SBSS하에서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부문별 주요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재무항목의 경우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적 안정성 등을 평가함하고, 계량비재무항목의 경우 기업개황과 대표자 업력 및 금융거래성향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순수비재무 항목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기술력, 성장성 등의 정성평가를 하고 있다(중소기업연구원(2009), 28쪽).

3. 개선과제 : 기술금융의 필요성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와 자금지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정책금융기관들이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창업 초기 혁신형 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식기반경제의 심화에 따라 기술·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를 감안할 때 선진기술의 모방이나 요소투입의 확대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달하였다. 혁신역량 강화 및 기술혁신에 의한 총요소생산성(TFP)의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식, 기술의 생성 및 이에 기초한 산업의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의 배분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R&D-창업-사업화 등 기술혁신의 순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공급을 포괄적으로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이라 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무형자산이 담보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금융관행 하에서 미래 수익을 가져올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기술의 개발·사업화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금융은 그 내재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는 불확실성 및 실패의 위험성이 높고, 또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에 소위 정보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자금공급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금공급자는 계약 이전 단계에서는 기업의 과대 포장된 정보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Lemon), 즉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할 위험이 있다.

자금공급계약 이후에는 기업활동을 일일이 간섭하거나 알 수 없는 입장에서 투자 받은 기업이 돈만 받고 기술개발이나 경영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있다(김광희(2008), 51쪽). 즉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의 야기로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금공급자는 재무상태(물적

담보) 및 경영실적 등을 중시하고 무형의 기술자산에 대한 미래가치 평가를 토대로 한 투·융자는 기피하게 된다. 특히 실적이 있을 수 없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기술개발·혁신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외부경제효과에 비해 기술개발·혁신 투자가 사회적으로 과소투자 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기금으로 보조금이나 융자 형태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 투자 등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금융시장의 시장실패가 너무 강조되어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시장을 주도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 및 정부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현재 기술금융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보증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시중은행은 단지 부분보증비율 정도의, 10~30% 책임만 부담하는 수동적 대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부가 기업을 심사평가·선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따라서 민간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확대 및 자본시장의 활용을 유인하여 민간자본의 역할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술금융시장의 시장친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정한 기술금융시장의 형성을 통해 기술금융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김광희(2008), 52쪽).

하지만 바젤II협약에 의해 시중은행들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금융기관들의 대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된다. 물적 담보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이 선호되는 반면 기술혁신형 기업과 같이 물적 담보력이 약한 기업에 대한 금융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들의 금융수요를 지원할 수도 있겠으나, 정부지원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민간금융의 기술금융 확대가 필요하다.

제 4 장

기술금융 활성화 관련 정부정책 검토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TCB 제도의 주요 내용

제3절 TCB 제도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제4절 TCB 제도의 정책적 보완 사항

제4장 기술금융 활성화 관련 정부정책 검토

-금융위원회(2014.6)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한-

1. 추진배경

정부는 신정부 들어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현과 관련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자금문제라고 보고 이의 해소를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 전략을 최근 강구한 바 있다. 이러한 추진 배경에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기술집약적인 생산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과 특히 고용 창출과 관련하여 기술기업이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고용 효과가 크다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²⁾

그런데 기술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의 육성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술금융의 육성을 통해 ‘가능성에 투자’ 하는 새로운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아이디어 위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기업의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기존 기술금융 구조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신규 상장기업 수가 감소하는 등 시장 부진 상황의 원인은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한 유망한 기업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증에 의존해 온 기존의 융자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 기반의 자금조달’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³⁾

2) 기술기업의 평균고용은 27.3명으로 일반 중소기업(3.8명)의 7.2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2010년 기준, 중소기업청)

3) ※ '13 기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규 융자공급 8조 8,927억원 중 기·신규 보증부 대출규모는 6조 184억원(66.7%),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경우 5,263억원(6.6%)을 차지하고 다.

기술금융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기술평가시스템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기술금융을 충분히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기술신용평가사(TCB)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관련기관의 제도권내 참여 유인 확보 및 참여주체들의 역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2. TCB 제도의 주요 내용

1) TCB 제도 관련 주체

① 기술신용평가사(TCB : Tech Credit Bureau)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상 10명 이상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민간신용평가사(CB)*는 TCB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재 2개 민간신용평가사(NICE, KED)가 TCB 선정업체로 거론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에 한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이 TCB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TCB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의 정보와 실사정보를 토대로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②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 Tech Data Base)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기술정보, 권리정보, 시장정보 및 TCB 기술신용평가 정보 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③ 은행

산업은행의 경우 오래된 기술평가 및 기술신용평가서부 대출경험을 보유하고 있고⁴⁾,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최근 기술전문인력 채용 및 기술평가대출팀 구성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어있으며, 기타 시중은행들은 기술신용평가대출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향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TCB 제도의 특징

TCB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기존의 신용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체 특히 R&D형의 기술집약적인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 미래가치성을 존중하면서 positive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 평가기관을 지향하는 것으로 과거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술DB 정보를 활용하여 수요자의 기술신용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정보를 제공코자 하고 있다.

둘째 평가 주체(TCB)와 대출 주체(은행)의 분리이다. 은행 자체적인 기술평가대출⁵⁾의 경우 평가 주체와 대출 주체가 일치하고 있는데 반해 TCB제도의 경우는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를 하지 않고 외부평가에 근거해 대출을 실시하는 평가자와 대출자가 분리된 구조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4)산업은행은 1954년 기술부를 신설한 바 있고, 2005년 이후 기술금융상품을 개시하였다.

5) 참고로 현재 산업은행의 기술력 평가 대출에 있어서 평가방식은 기술력 평가의 경우 기술경영능력, 보유기술의 사업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출실적은 2006-2012년간 총 185건, 1,844억원의 기술력 평가 대출을 시행하였다.

셋째 수요자인 은행 중심의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수요자인 은행이 원하는 정보는 부도율 예측에 중요한 기업신용정보가 포함된 형태로 만들어진 기술평가정보이다.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던 기존 기술평가와는 달리 TCB는 기술부문과 신용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신용평가 자료를 생산하여 대출심사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TCB 제도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1) 은행·기업의 TCB 제도 참여율 저조

TCB 제도가 도입되고 실제 금융기관을 통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제도 참여율 저조를 들 수 있다. 종전의 보증대출과는 달리 기술신용평가서부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채권의 부도 위험을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 있어서 TCB 평가 모델에 대한 유의성 검증 부재 및 평가 주체와 대출 주체의 불일치로 인해 기술신용평가서부 대출이 위축되고 기피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TCB, TDB에 대한 기술기업의 기술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참여율 저조가 예상된다. 특히 TCB가 개별 평가대상 기술기업들에 관한 여러 평가정보들을 유출할 경우 비정상적인 이윤 발생 동기가 존재할 수 있다.⁶⁾

아울러 (관리 미흡) TDB 관리주체인 은행연합회는 민간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기술정보 및 기술신용평가정보의 보안·관리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는 등의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⁷⁾

6)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을 유출·판매한 사례가 있다

7)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14.01)로 인해 특히 금융권의 보안관리에 대한 신뢰가 저조한 상황

2) 기술 금융 시장의 평가·활용 역량 부족

기술 금융 시장에 있어서의 평가 및 이의 활용 역량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평가 경험 면에서 TCB의 평가 역량 부족과 노하우 부족에 따른 문제점 역시 제기될 수 있다. 과거 산업은행의 경우 기술력에 관한 평가인력 교육에 있어서 3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없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장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TCB 지정 요건 제약에 따라 기술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다양성·전문성 부족과 TCB 평가역량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CB사만 검업허가를 통해 TCB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허법인·회계법인 등이 기술신용평가 시장 참여시 미국의 예와 같이 부문 특화된 기술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전문화 범위, 영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경우 기술평가대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TCB 평가정보를 활용할 만한 내부 역량의 부족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제도외적 요인으로 인한 기술신용평가서부 신용대출 제약

아울러 제도외적 요인으로서 아직 우리나라는 기술거래시장이 미성숙하여 은행의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하는 점도 신용대출에 제약요인으로 제기될 수 있다. 기술신용평가서부 대출채권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해당 기업의 기술을 기술거래시장에 판매하여 원리금의 일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 기술거래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신용평가서부 대출채권에 대한 은행의 원리금 회수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한다.⁸⁾

이미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보증 규모가 과다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TCB를 활용한 신용 대출의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므로 오히려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보증부 대출보다는 기술신용평가에 근거한 신용대출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4. TCB 제도의 정책적 보완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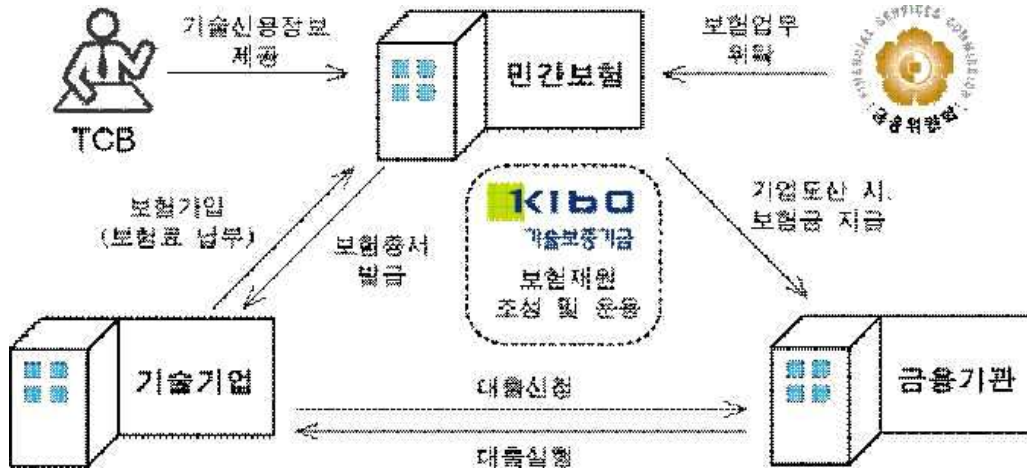
1) 은행·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기술대출보험 신설

은행에 위험관리 방안을 제공하여 기술신용대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실패 기업에게 회생기회 부여 및 기술 사장 가능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술대출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운영방식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기업에 대한 보험가입, 보험증서의 발급, 대출의 흐름으로 진행되게 된다.

8) ※ 우리나라 기술거래시장의 규모는 약 2조원 정도로 추산되며('06 기준), 전체 투자액 대비 비중은 미국의 1/21배 수준이다. 한편, 국내 기술거래시장 비활성화는 기술신용평가서부 대출 미활성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림 4-1] 기술기업에 대한 보험가입, 보험증서 발급 및 대출 흐름도



자료 : 금융위원회(2014), 6쪽에서 인용

이 경우 보증부 대출과 달리 기업의 도산 시에 기술에 대한 대위권이 선택적으로 발생하여⁹⁾ 실패 기업이 회생기회를 갖고 기술의 사장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

TCB의 기술신용정보 유출금지 조항 및 별칙규정 신설과 TDB 공공기관화를 통한 정보유출방지로 기술기업의 TCB 제도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TCB가 취득·생산한 기술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 시에 강력하게 벌칙을 적용하는 것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TDB를 은행연합회 산하에 두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부터 독립시켜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 기술 금융 시장의 평가·활용 역량 강화

9) * 부도 후에도 기업은 보험기관에 사후보험료(손실금액×사후보험료율)를 지급하면 기술소유권을 재취득하여 회생이 가능하게 된다.

기술금융시장의 평가 및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평가실명제 실시, TCB 평가역량 제고를 위한 하이클래스 신설, TCB 인가 요건 개정 및 “TCB 정보 마당” 실시, TCB 활용 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

① 평가실명제 실시

평가실명제란 기업의 기술신용가치를 평가하고 정보를 생산하는 평가자의 실명을 평가정보에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술신용평가에 있어 평가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의 목적은 TCB로부터 생산된 기술평가정보에 대한 평가자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평가자가 스스로 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TCB가 발행하는 모든 기술신용평가서에 평가자 실명을 기재할 것을 신용정보법상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② 「하이클래스(High-Evaluating Class)」 신설

국내·외 우수 기술평가기관의 노하우를 TCB에 전수, 경험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개별 TCB의 평가역량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미국 기업평가사협회(IBA)의 예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한국기업·기술가치 평가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기술평가사 자격증 교육 훈련 과정의 경우 평가모형의 이해 등 이론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술신용평가시장이 성숙한 해외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시장의 평가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한 예로 미국의 우수 기술평가기관인 AUS, CHI Research, PatenValue Predictor와의 MOU 체결 추진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하이클래스 과정은 실무교육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두어 운영하며, 실무교육은 기술평가 집합 교육, 기술기업 방문 및 실사 연습,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연습, 해외 전문 인력 특강 및 멘토링을 실시하고, 해외연수는 해외 우수 기술평가기관 방문, 우수 기술평가 방법 전수를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TCB 인가 요건 개정 및 “TCB 정보마당” 실시

다양한 법인들의 TCB 시스템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다양성·전문성 확보 및 경쟁 활성화, TCB 평가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가 요건 개정 및 의견수렴을 위해 “TCB 정보마당”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TCB의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특허·회계·법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CB 및 기보의 경우 기술신용 종합평가기관으로서, 그리고 특허법인은 회계·법무 법인과 연계하여 기술 분야별 전문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분담하여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잠재적 TCB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정 법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개정법 관련 정보제공과 TCB 제도에 관한 추가적 의견수렴을 위하여 “TCB 정보마당”을 실시토록 한다.

④ 「TCB 활용 지원센터」 구축

기술평가 전문인력이 미비한 은행을 대상으로 단기간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과 기술신용평가서 해석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TCB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전문적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독일의 슈타인바이스 재단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각각의 기술 분야별¹⁰⁾로 박사급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센터를 구축함으

10) 일반제조, 바이오, 환경, SW, 닷컴, 디자인, 융합, 전기 분야 등

로써 은행의 요청시 TCB 기술신용평가서에 대한 해석 및 조언 제공, 대상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담당부서와의 정기적인 전문 면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현재 수준에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전문인력의 역할은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닌 TCB의 평가를 해석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TCB제도 도입의 본질에 크게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인력 채용규모는 8명(분야별 1명)으로 하되, 4년 시행 이후 성과 평가 결과 및 은행의 수요 조사결과에 따라 제도 지속여부 및 인원 증·감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제도외적 요인 개선을 통한 기술신용대출의 확대

이밖에 ① 기술중개기관에 대한 TDB 정보의 제공 ②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 비중의 점진적인 감축을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중개기관에 대해 TDB 정보 제공의 목적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을 통해 기술중개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등록된 국내 40개 안팎의 기술중개기관에 대하여 TDB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하고 기술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유의사항으로는 기업의 핵심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기초기술정보(기술정보, 시장정보, 특허정보)로 한정하는 것이며, TDB 관리대상 정보 중 TCB 기술신용평가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술거래시장내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회수 수단 확보로 인해 금융권의 기술평가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이를 통해 기술금융 시장에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기술평가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금융시장의 자생력을 제고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TCB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유의성 검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보증부 대출을 줄임으로써 기술력 평가에 기반 한 기술금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5 장

정부의 기술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보완 대책

제1절 기술금융 특화·전문화

제2절 기술평가보증 확대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효과적 육성

제3절 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

제5장 정부의 기술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보완 대책

1. 기술금융 특화·전문화

1) 기술평가보증 지원체제 강화

기술금융 특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심사기법의 기술평가보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평가보증은 재무실적 및 신용등급 위주의 전통적 심사기법과는 달리 기술력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금융제도이다. 따라서 기술평가보증의 확대야말로 경쟁 보증기관과의 유사성 문제를 불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평가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신상품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반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기술혁신기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평가보증 대상을 신기술사업자로 확대하여 수요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여기에서 기술평가보증 지원대상은 기술혁신기업, 기술창업 및 기술개발 관련 정책자금 이용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신기술사업자는 제품 및 공정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기업화·제품화, 기술도입 및 소화·개량 등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술평가사¹¹⁾ 배출 확대 등 기술평가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일반직원의 능력 배양을 통해 영업점의 기술평가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함으로써 영업점의 기술평가보증 취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기업의 기술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기술개발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Package형

11) 박사급 인력의 신규채용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평가에 적합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01년 이후 시행된자격제도로, 일반직원중 일정한 양성과정 및 자격시험을 거쳐 선발하는데 2006년 6월말 현재 358명을 보유

또는 Project형 상품을 개발하여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기술평가보증의 취급 기반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술평가를 통해 단계별로 지원금액을 일괄하여 선정하고, 사업화 진척도에 따라 그에 적합한 보증을 지원해 나간다.

[그림 5-1] 기술개발 프로세스별 기술평가보증 지원체계(예시)

프로세스	자금용도	지원상품
기술개발	기술개발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험 검사비, 교육훈련비 등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등
시제품제작	견본품 제작 및 외주가공비 등	-중소기업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금융기관 기술개발공동지원사업 등
사업화	양산을 위한 시설자금 및 마케팅 비용	-기술평가인증 연계 신용대출 -기술평가투자보증 등

자료 : 기술보증기금(2006), 107쪽에서 인용

2) 기술혁신기업 지원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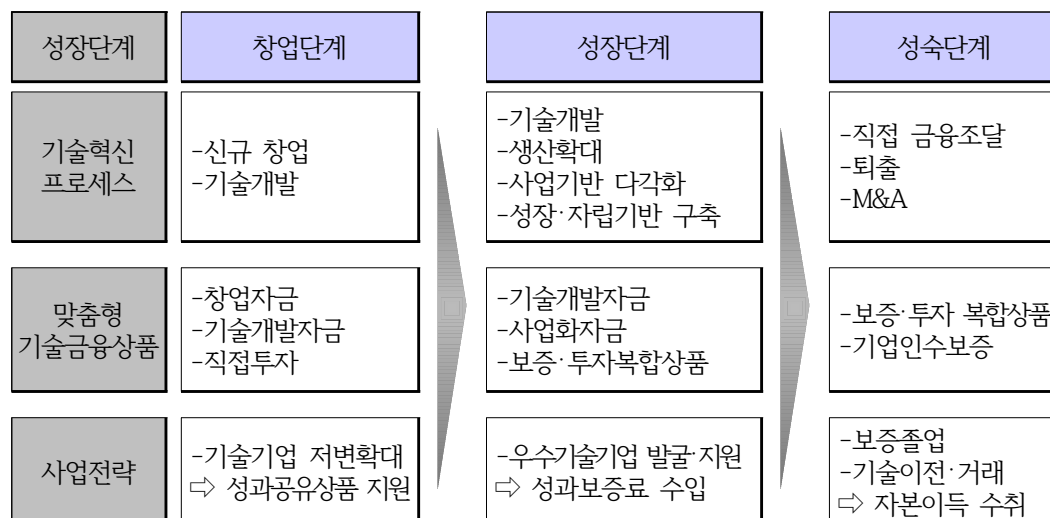
향후 기술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과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따른 금융지원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벤처기업을 포함한 광의의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타 보증기관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실제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벤처기업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기술혁신 중소기업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벤처버블의 붕괴와 함께 급격히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원 역할을 담당하였던 벤처캐피탈 시장도 침체를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벤처펀드 역시 2000년 1조 4,341억원(조합수 194개)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시장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금융 지원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기술혁신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로 직면하게 되는 위험의 종류와 성격을 파악하여 각 성장단계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과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기술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은 안정 성숙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물적담보 확보 및 신용추적 등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창업 및 성장단계와 연계한 체계적 지원 없이는 원만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5-2]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금융상품(예시)



자료 : 기술보증기금(2006), 109쪽에서 인용

창업 초기의 기업은 규모는 작으나 위험도가 높아 시장에서 가장 소외받기 쉬운 기업으로, 성장동력의 발굴 육성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창업관련 보증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민간 벤처캐피탈이 회피하는 High-Tech & High-Risk 기술창업

기업의 금융지원 인프라를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를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성장단계의 기업은 추가적인 기술개발과 사업 확장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등 성장토대를 구축하는 기업이다. 각종 사업화 자금에 대한 중점적인 보증지원과 함께, 보증과 투자 등이 복합된 Hybrid상품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성과와 연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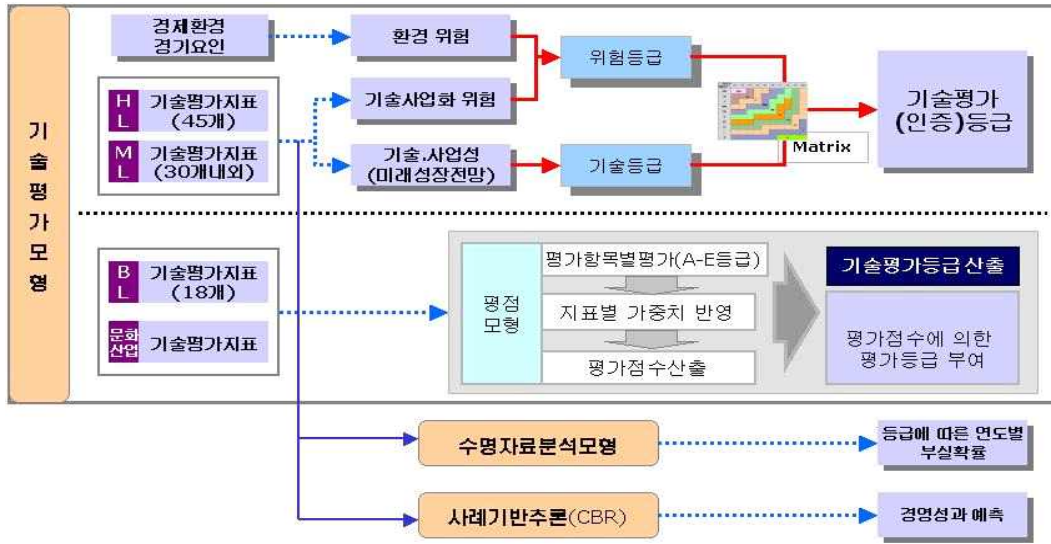
한편 성숙단계의 기업은 자기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과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 경우에는 예컨대 기업인수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투자회수와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는 등 시장원리의 적용을 강화한 생산적 구조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술혁신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보증운영 이외에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은행 중심의 보증지원 이외에 신기술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의 업무파트너십을 정립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원방식의 변화는, 벤처캐피탈 시장의 위험을 신용보증회사가 공적기구로서 적정수준의 이익만 확보하는 수준으로 분담하게 되면, 공공부문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가운데 시장의 원만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평가는 평가의 목적, 기술수준, 보증신청금액 등에 따라 평가수준을 High-Level (HL), Middle-Level(ML), Basic-Level(BL), 문화산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3] 기술평가 흐름도



자료 : 기술보증기금(2006), 32쪽에서 인용

High-Level, Middle-Level에 의한 기술평가는 위험등급과 기술등급의 조합에 의해 최종적인 기술평가(인증)등급을 부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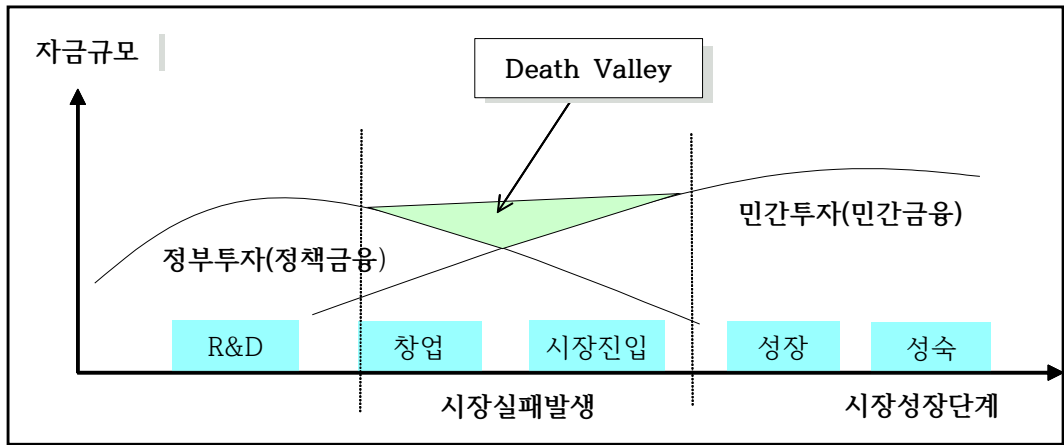
2. 기술평가보증 확대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효과적 육성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력 등 미래가치 위주의 심사를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의 대표적 상품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영업실적이 없어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는 기업 등을 지원코자 과거 기술보증기금에서 도입한 차별화된 보증제도이다.

그러나 기술평가보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창조적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기술금융 상품이라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금융적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즉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 사이에 꼭 건너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5-4] 기술발전단계별 지원자금규모와 Death Valley



자료 : 기술보증기금(2006), 52쪽에서 인용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음의 계곡이란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으로부터도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즉 연구개발단계를 벗어나 창업단계에서 시장진입단계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1) 기술평가 활성화를 통한 기술평가·금융시스템 혁신

기술평가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으로, 기술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보증 및 투자 등 금융을 포함하여 기술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술의 자산가치 평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속적인 평가시스템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 기술평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사업 확대 및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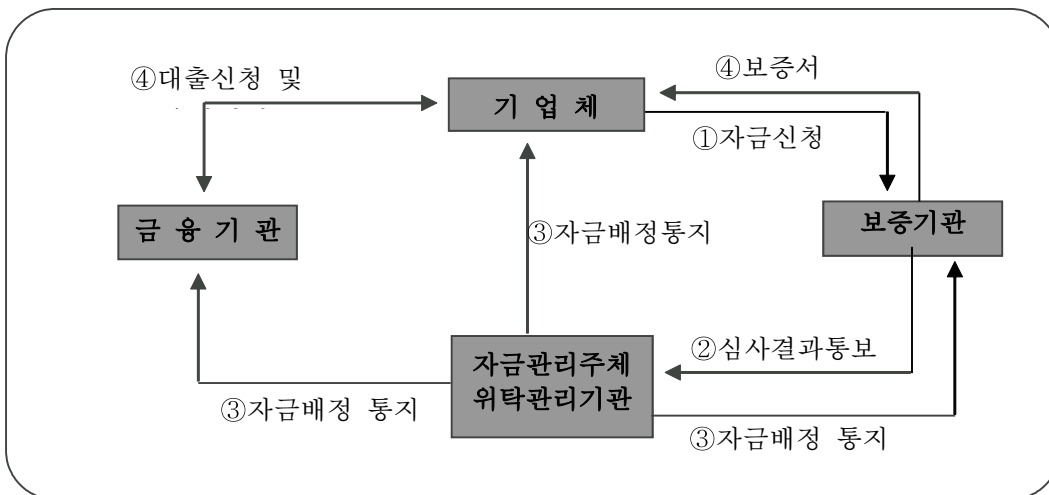
용평가기관은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는 기술평가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자금공급의 여지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기존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여신관행 등을 감안할 때 기술평가인증서의 신뢰도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혁신적인 방향에서 변화를 지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2) One-Process 확대를 통한 정책금융의 효율성 극대화

예컨대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술평가를 통한 1회의 심사만으로 지원대상기업 선정과 지원규모 등을 동시에 결정함으로써, 자금관리·용자취급 기관에서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One-Stop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전보증기관에 확대 운영토록 하도록 해 나간다.

[그림 5-5] One-Stop 지원 절차도



자료 : 기술보증기금(2006), 59쪽에서 인용

이러한 정책자금의 One-Stop 지원이 갖는 우선적인 효과는,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 위주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또한 One-Stop 지원의 또 다른 효과는, 심사과정 일원화에 따른 자금위탁 관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중복업무의 감축에 따른 업무처리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신청서식의 표준화 및 중복서류 간소화로 인해 기업의 편의가 향상된다는 점이다.

3. 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

단기적으로는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시장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평가와 금융이 연계된 기술금융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기능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 과정이 기술금융시장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공신력 있는 외부의 기술기업 기술평가정보가 제공될 경우 은행의 기업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초기 기술기업 대출이 용이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정보제공의 형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 생성, 평가, 분류하는 뷰로(bureau)에서 효율적이고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해당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대출자의 신용정보를 집적하여 은행에 제공하는 CB와 그 형태와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술신용평가(TCB, Tech credit bureau)라 지칭될 수 있다.

향후 기술신용평가 TCB를 설립하는데 있어 기술보증기금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보가 TCB를 운영하면서 일정수준의 기술평가정보가 보장되

고 기업기밀 유출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¹²⁾ 보증사업을 위해 다수의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기술보증기금이 TCB를 운영하기 때문에 CB와 달리 주문방식으로 뷰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한 기관이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평가스케일, 평가체계, 평가모형, 평가인력 교육 등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은 기존의 폐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은행에 제공하는 기술평가정보 폭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향후 기술금융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술평가 역시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CB 평가등급뿐만 아니라 평가등급 산출에 사용된 각 평가지표별 과거 부도율과 분포, 평가모형을 은행에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은행이 내부모형 평가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여 은행이 TCB 기술평가정보를 활용하는 자체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대응과 함께 기술금융 공급 위주의 정책적 접근을 시장조성이라는 목표로 확장하여 시장인프라 확충, 민간부문의 역량 제고, 수요기반 확충 등 기술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형태로 시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집약형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신용평가기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차입기업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용공여이전의 사전단계는 물론 신용공여 후 원리금 회수까지의 사후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전문 CB(Credit Bureau)를 육성하여 여기에 중소기업 정보를 집중시킴으로써 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중

12) 정부의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합동,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14-1-22를 참고하시오. 본 연구에서는 보증제도 관점에서 특히 기보 관점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소기업에 있어서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개인신용정보 및 사업이력 정보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CB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거래 및 상거래시 CB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장기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보다 심화된, 고위험 고수익 경제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하에서 금융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기업간 관계형금융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대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은행은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발굴한 후 이들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이들 중소기업을 은행의 수익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술측면에서 잠재력은 있으나 경영관리 능력 등이 미흡한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적절한 기술평가 능력을 갖춘 은행은 자금공급과 더불어 맞춤형 경영지원 서비스, 대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지원 등도 제공하고 필요시 지분도 보유함으로써 장기 고객관계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의 과제로 벤처캐피탈 시장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며 공적 보증기구가 벤처시장에서 민간 역할을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¹³⁾¹⁴⁾ 예를 들어 정부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벤처캐피탈의 자금차입에 대한 보증을 통해 민간 벤처캐피탈의

13) 본고의 분석 대상은 창조경제하의 신용보증의 역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창조금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제도 관련은 별도의 과제로 제기한다.

14) 기타 보증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에 대한 민간금융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보증 대출, 기술인증 신용대출 등 지식재산 관련 대출을 활성화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술보증대출은 보증재원을 주로 재정에 의존하는 점에서 공적보증으로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하는 기술평가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대출하는 것이다. 기술인증 신용대출은 기보가 발급하는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해 은행이 자체 여신 심사를 통해 제공하는데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은행이 부담하므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기술인증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레버리지 역량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담보 대출과 지식재산 자산운용사 및 펀드, 클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적 보증기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대전지역의 경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창조금융의 활성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것이 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로 인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대덕 지역의 경우 5년 이내의 초기단계 기업들은 자기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첨단, 초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창조금융 시스템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거나, 기업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을 중심으로 보증제도의 개선¹⁶⁾은 물론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와 같은 투자 형태의 직접금융의 활성화 역시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유경원 외(2014), 37-38쪽).

지역내 상황에 적합한 창조금융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기술평가를 활성화하고 이에 따라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의 연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¹⁷⁾ 기업의 성장단계별 전략에 따라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 확대도 지역내 창조금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지만 이와 아울러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진 벤처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간중심의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의 활성화가 역내에서 이루어

15) 구체적인 방안 등은 본고의 작성 범위를 벗어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공필·이지연(2014) 등을 참조하시오.

16)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등의 미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보증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가 기보에 의해 도입된 바 있으나 아직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17) 기술평가 시스템이 2000년대 중반 들어서 본격 구축되기 시작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기술평가 신뢰도가 낮은 편이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질 필요가 있다.(유경원 외(2014), 38쪽) 특히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와 같은 투자형 창업금융의 지역내 활성화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 벤처금융 관련 제도 개선은 물론 지역내 관련 운용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펀딩 주체와 기업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¹⁸⁾

18) 벤처금융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김세종(2014)를 참조하시오.

제 6 장

지역산업금융 신용평가 운영방식 개선

제1절 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제2절 신용보증제도 운용상 개선방안

제6장 지역산업금융 신용평가 운영방식 개선

1. 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사용하기 보다는 지역 중소기업이 열세에 놓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하는 시장 인프라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지역금융시스템 구축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관한 신용정보 축적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자체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부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에 수반된 추가적인 신용리스크는 개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도 아닌, 지역공동체 전체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열악한 지역금융시장을 만들어낸 것은 그 동안 국가주도, 중앙집중형 성장방식과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과거유산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단순히 시장원리에 의해 개별 금융기관이나 개별 기업에 배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지역에 대한 헌신비용은 은행이나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금융시스템의 내부에서 지역 전체가 공동투자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을 위한 양호한 시장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의 지역 내 배분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계 전체의 공동투자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1) 신용보증 및 신용대출 확대제도의 강화

우선 단기적으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예금은행을 비롯한 비통화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과 같은 중앙의 신용보증기금이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가용자금(credit availability) 규모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한 대출지원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조합(재단 등)의 기금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재단 등)의 기금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출연금 확대는 물론 재원마련을 위해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들의 영업규모와 비례해서 참여확대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지역 중심은행으로서의 하나은행 지역본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떠안고 시와 협력하여 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 관점에서 우선 용이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자체 및 지역 금융기관, 정부 등의 출연금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되고 있는 금융기관 출연금의 일정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도 분담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적정 보증운용배수(10배수 내외)에 미달하여 운용되고 있는 보증실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증신상품 개발, 지역

중소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DB 구축,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창업기업 보증 확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신용평가 기능 강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및 산업에 대한 신용조사와 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담보대출 중심에서 신용대출 중심으로 지역금융의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는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소규모 지역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1) 지역기업 정보센터 설립

이러한 신용조사와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및 기업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여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 내 기업의 각종 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가칭 「지역기업 정보센터」와 같은 것을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 금융기관들의 여신심사에 이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기관은 더 나아가 기업신용의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지역내 우량 기업을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중심적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의 조절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사업 성격으로 지역경제와 관련한 각종 경기통계를 작성하는 한국은행(지방지점)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선결될 때 지역경제와 관련한 통계를 상세한 수준에서 작성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합당한 지역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2) 소규모 지역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아웃소싱 시스템 마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많은 신용보증기금 회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회사와 더불어 신용조사, 평가기능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신용평가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토록 한다.

2. 신용보증제도 운용상 개선방안

1) 중소기업 전담 신용평가기관의 설립

(1) 전략적 제휴나 공동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전담 신용평가기관 설립

지역적으로 보면 여러 신용평가기관이 있으나 주로 회사채 발행능력이 있는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중소기업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조사에서 심사, 평가까지 중소기업의 신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기관을 통해 상호인적교류, 공동조사, 신용정보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상호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금융기관을 위시한 지역경제계 전체의 공동투자를 통한

지역중소기업의 신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공동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 회사의 설립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용평가회사는 각종 신용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지역기업정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하성근, 85-89쪽).

(2) 지역 신용평가기관의 설립을 통한 보증 서비스의 강화

현재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는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소규모 지역금융기관의 경우 인력과 인프라의 한계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신력을 확보하면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신용평가기관에 아웃소싱 하도록 유도하며, 체계화 되고 공신력 있는 평가를 통해 부분보증제도에 대한 은행의 거부감을 상쇄시키고 인적교류를 통해 평가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술신용 평가기관의 설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자금수요자의 신용능력에 대한 평가는 표준화가 가능한 정량적 정보, 특히 재무제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핵심적인 투입요소로 하는데, 이는 기업의 과거 재무성과 와 미래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간에 상당히 강력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창업단계 중소기업의 경우 전통적인 신용평가모형에서 투입요소로

요구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환능력 평가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대

(1) 신용보증제도의 수요확대에 따른 보증재원의 확대 필요

최근 수년간 중소기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정책보증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급증하였고, 향후 중소기업의 지식경제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대가 요구된다.

(2) 정부출연의 지속적 확대 필요

일반회계기준 정부출연금 비중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 53.9%, 일본 80.9%, 대만 80.5%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대만에 비해 출연금의 비중이 낮다. 따라서 정부출연예산의 조기집행에 의한 기금운용 차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 금융기관 출연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출연저항이 예상되므로 대위변제율 연동 출연제도의 도입에 의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설정하고, 전체 대위변제율 대비 각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을 현행 출연율의 가중치로 적용하여 다음연도 출연요

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연요율 조정의 범위 상하한선을 설정하여 현행보다 과도하게 출연부담이 급격히 증감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4) 부분보증제도의 비중 증대

부분보증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통해 보증사고에 따른 손실을 축소시키고, 부분보증제도에 대한 은행권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해야 한다.

(5) 보증료율의 차별화 확대

기업신용도, 보증종류, 보증기간, 금액에 따른 차등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 정책목표에 따른 차등율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의 실현을 위해 창업, 벤처기업, 사업전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등율을 적용하여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을 통한 대출자금의 사용내역에 따른 차등율을 적용해야 한다. 자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발생 시 정책대상에 따른 할당제를 도입하고, 특별보증 중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보증은 일반보증으로의 전환 및 보증료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3) 신용보증제도 개선·확대 및 지원기관과의 연계 확대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의 확대로 자금애로 해소를 통한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 성공가능성 있는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후지도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전문적인 지역신용평가기관의 설립에 앞서 우선적으로 현행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자금신청업체는 자금배정기관과

신용보증기관, 금융기관에 각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서류 및 대출과정이 중복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대출 실행율이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 배정받은 금액과 보증금액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민원 발생의 우려가 많다.

기업의 자금배정은 상환능력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결정되는 반면, 신용보증지원은 상환능력을 추가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이들 금액간의 차이(gap)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신용보증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신용보증 한도의 정책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와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여러 중소기업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향후 중소기업 대상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경영지도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4) 기술가치보험제도 도입

현행 금융기관들은 담보대출을 관행으로 하고 있어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이라 해도 초기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의 기술보증이나 기술담보제도 하에서는 부도 또는 도산시 담보대상 기술력이 기업 채무보전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력을 보전할 수 있게 하여줄 새로운 제도의 모색, 즉, 기술력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술가치보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가치보험이란 기존 기술가치담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도산시 정책적인 보험제도에 의해 기술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어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게 회생기회를 주는 한편,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의 사장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기술가치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 기술평가제가 확대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앞으로 신용보증 기술평가제를 특허출원 기업, 실용신안 등록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자금추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수혜기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보증공급을 통해 One-Stop 서비스의 제공 및 기술력이 우수한 대덕특구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성장성 있는 기업임에도 창업 초기의 담보·매출액 부족으로 정책자금의 용자지원이 어려운 우수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보증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되는데, 우선 대상업체는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벤처등록기업, 특허등록기업, 국내신기술등록기업(KT, NT, EM, IT, INNO-BIZ 등) 등으로 하고, 기술평가 절차는 【기술평가의뢰 / 시 ⇒ 기술평가후 신용보증발급 / 기술평가센터 ⇒ 자금대출 / 금융기관】으로 설정하고, 기술평가를 통한 자금추천 희망기업에 대하여 일정 평가수수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제 7 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개별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궁극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은 주요 업무내용이 기술신용보증과 기술평가 등에 있는 만큼 다른 신용보증기관들에 비해 중소기업 금융정책에 있어서 혁신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업무영역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신용보증에 기초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운용면에서 역할과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대전지역의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금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 대출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보증 규모에 있어서는 최근 5년 사이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금융부문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장 분위기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신용보증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동화, 창업 활성화, 정보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을 지원하고, 천재지변 및 노사분규,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금의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지원제도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정책에 대한 니즈 혹은 경영애로사항이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의 핵심은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이라 할 수 있다. 기본 아이디어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중소기업을 통해 사업화되어 성공할 때까지 필요한 금융지원을 수요자 니즈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공급의 조절판 역할을 하는 신·기보 기능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고 대출·보증 중심의 지원방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방식의 다변화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기존 수동적 지원자(supporter) 역할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견인자(attractor)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다. 즉 창조경제하의 시장의 실패로 인해 시장성립이 어려운 창조금융 공급에 있어서 초기에 정부가 앞서서 시장을 형성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신용보증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금융니즈를 토대로 기업의 생애주기별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양적인 측면의 지원방식이고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사전적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보완적인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술성과 미래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증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이래 기술 및 미래 사업성 등 순수 비재무 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가동 중에 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기술성과 미래사업성 위주로 기업 신용평가를 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 즉,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과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방식이 깊은 관

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간 보증대상의 차별화를 확대하도록 하였는데, 크게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일반혁신형 기업, 수출, 영세소기업 지원에 특화하도록 한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 지원에 특화하도록 하였다.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와 자금지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정책금융기관들이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창업 초기 혁신형 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기금으로 보조금이나 융자 형태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 투자 등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금융시장의 시장실패가 너무 강조되어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시장을 주도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 및 정부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신정부 들어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현과 관련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자금문제라고 보고 이의 해소를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 전략(금융위원회(2014.6)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한)을 최근 강구한 바 있다.

2. 정책제언

최근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기술신용평가사(TCB)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관련기관의 제도권내 참여 유인 확보 및 참여주체들의 역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1. 이러한 TCB 제도의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은행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둘째 기술금융 시장의 평가 및 활용 역량 강화, 셋째 제도외적 요인 개선을 통한 기술신용대출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술금융 시장의 평가 및 활용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평가실명제의 실시, 고급교육과정 신설, TCB 인가요건 개정, TCB 활용 지원센터 구축 등의 부가적인 사업이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2. 정부의 기술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보완 대책으로는 ① 기술금융 특화 및 전문화 ② 기술평가보증 확대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효과적 육성 ③ 금융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 기술금융 특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심사기법의 기술평가보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되, 장기적으로 기술금융시장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공신력 있는 외부의 기술기업 기술평가정보가 제공될 경우 은행의 기업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초기 기술기업 대출이 용이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3. 지식집약형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신용평가기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벤처캐피탈의 자금차입에 대한 보증을 통해 민간 벤처캐피탈의 레버리지 역량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담보대출과 지식재산 자산운용사 및 펀드, 클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적 보증기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산업금융 신용평가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① 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② 신용보증제도 운용 개선 등 구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사용하기 보다는 지역 중소기업이 열세에 놓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하는 시장 인프라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지역금융시스템 구축의 요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 및 신용대출 확대제도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예금은행을 비롯한 비통화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과 같은 중앙의 신용보증기금이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5. 신용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및 산업에 대한 신용조사와 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담보대출 중심에서 신용대출 중심으로 지역금융의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기업 정보센터 설립, 소규모 지역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아웃소싱 시스템 마련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6. 신용보증제도 운용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전담 신용평가기관의 설립,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대, 신용보증제도 개선, 확대 및 지원기관과의 연계 확대 등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 전담 신용평가기관의 설립 문제는 전략적 제휴나 공동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전담의 신용평가기관의 설립과 이를 통한 보증 서비스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그리고 신용보증제도의 수요확대 따른 보증재원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출연의 지속적 확대 필요, 금융기관 출연제도 개선, 부분보증제도의 비중 증대, 보증료율의 차별화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밖에 기술가치 보험 제도의 도입

< 참고문헌 >

- 강만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성과와 과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국제 세미나 발표자료, 2014.6
-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방안’, 2014.6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운용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안’, 2006.10
- 김광희외,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8
- 김광희,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제21권 제3호, 2008
- 김상봉, 김정렬.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6 (3): 1381-1399, 2013
- 김세종, ‘창업·벤처금융 활성화방안’, 금융투자, 2014.6
- 김자봉, 이석호,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12
- 변현수, ‘기업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 KDB산업은행, 2010
- 변현수, ‘은행의 산업대출과 산업별 재무특성간 관계 분석’, KDB산업은행, 2012
- 서근우, 중소기업금융의 현황과 과제 : 관계형 금융을 중심으로, 연구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3
- 서호준,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 측정기법의 적용.” 한국공공관리학보 27 (1): 141-167, 2013
- 신용보증기금 성과평가부, 2010 신용보증 성과 및 국민경제기여도 분석, 신용보증기금, 2011
- 우소동, “한국의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2.
- 유경원 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역할”, 한국은행, 2014.9

- 유진, 함윤하, 김상문, 김선기, 「세계의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기금, 2012
- 임성복, ‘산업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금융체계 개선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2009
- 임형준, ‘기술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 신용평가 품질제고 방안,’ 주간금융브리프, 제23권16호, 금융연구원, 2014.4
- 임혜진, 권의중, 유승훈, “특별섹션 논문 : 신용보증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한국에서의 경험적 분석.” 중소기업연구 33 (1): 5-15, 2011
- 정남기, 이정우, 심우일, “중소기업 위험금융 활성화를 위한 소고“ 산업경제연구 25 (2): 1047-1068, 2012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09.8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혁신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방안」, 한국은행, 2005
- 한국금융연구원,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3
- 황혜란, 김경근, 정형권,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의 정책방향 및 과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2-7, 2012.

기본연구보고서 2014-15

지역금융정보 및 산업체 신용평가기능
개선 방안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4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1-826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19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000-0000 FAX 042-000-000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